

1970년대 박정희 체제에서의 ‘가계부적기 운동’ *

한 형 성**

요약

이 연구는 1970년대 박정희 체제에서의 경제성장이 당시 한국가정의 경제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가계부적기 운동’을 통해서 살펴본다. 1970년대 ‘가계부적기 운동’은 내자조달을 위한 ‘저축증진운동’과 함께 진행되었다. 박정희 체제는 소비절약과 내핍을 통하여 가계저축을 늘릴 것을 강조하였고, 〈여성저축추진생활중앙회〉와 같은 관변단체들이 가계부 배부, 가계지출모형 개발, ‘알뜰한 주부상’ 선정 등의 ‘가계부적기 운동’을 추진하였다. 1970년대 ‘가계부적기 운동’에 있는 주부담론은 가정에서 저축을 못하는 이유가 살림을 책임진 주부의 무절제한 소비 때문이고, 주부의 소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가계부를 적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계부적기 운동’은 초기에는 성과를 보였지만, 물가인상과 늘어나는 생계비 부담 때문에 운동의 한계를 드러냈다. 1970년대 대부분의 한국가정은 ‘인플레이션적 경제개발’에 수반되는 만성적인 물가인상 때문에 가계적자에 시달렸고, 가계저축률의 하락과 함께 ‘가계부 무용론’과 같은 ‘가계부적기 운동’에 대한 저항이 나타났다.

이 연구의 의의는 1970년대 박정희 체제에서의 ‘가계부적기 운동’의 배경, 성격,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이 운동에 내재한 주부담론이 한국가정에 수용 또는 거부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가정의 경제생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주제어〉 가계부, 박정희 체제, 1970년대, 저축, 한국가정, 주부담론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16S1A5A8018599)

**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조교수, han176411@cau.ac.kr, 02-820-5722.

I. 머리말

이 연구의 목적은 1970년대 ‘가계부적기 운동’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성격, 그 구체적인 진행 과정 그리고 ‘가계부적기 운동’이 1970년대 한국가정의 경제생활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시대로 알려진 1970년대는 박정희 체제의 주도 아래 진행된 여러 ‘운동’의 시대이기도 하였다. ‘새마을 운동’, ‘가족계획운동’, ‘혼·분식 장려운동’ 등 여러 운동들이 국가의 이름으로 대중들을 호명하여 박정희 체제의 유지·강화 전략에 순응하는 국민으로 만들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자립경제는 안방부터!’, ‘알뜰한 주부살림 나라자원 늘린다!’ 등과 같은 구호들이 말해주듯이, 1970년대 ‘가계부적기 운동’은 박정희 체제가 한국가정을 경제적으로 동원하여 국내자본을 조달함으로써 한국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또한 이 운동은 가계부를 적는 주부가 ‘살림 잘하는 주부’라는 담론을 생산·유포하여 ‘인플레이션적 경제개발’로 인한 물가인상과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주부의 책임으로 내면화 하려던 운동이었다.

1970년대 박정희 체제에서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앞선 연구들은 박정희 체제에서 진행된 운동들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성격, 전개과정 그리고 이 운동들이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습속, 신체, 언어, 사고 등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수용 또는 반발로 나타났는지를 연구하였다. 고원(2008)은 “농촌 새마을운동이 박정희 정권의 중요한 지지기반이었던 농촌사회의 급격한 피폐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제외된 데 따른 농민의 소외감, 상실감의 심화에 대응하고, 농민을 체제의 정치적 보루로 재조직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개되었으며, 농민을 합리적 생활규율로 무장된 근대적 공적 주체로 호명하는 프로젝트”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제욱(2008)은 1970년대의 ‘혼·분식 장려운동’이 “국가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시민의 일상에 개입하여 ‘입맛’까지도 국가를 위해서 동원했던 사례”라고 평가하며, 당시 박정희 체제가 ‘혼·분식 장려운동’을 ‘식생활개선운동’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것과는 달리, “부족한 쌀 때문에 쌀을 수입하던 것을 줄여서 외화를 아끼고,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로 값싼 밀가루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분식을 장려하여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혼·분식 장려운동’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승훈(2008)은 1970년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추진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당시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참가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농민들의 반응을 살펴

보았는데,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실제적 성과는 극히 미흡하거나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인터뷰를 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한 이유는 “근대화 과정에서 배제된 농민들의 소외감, 도시에 대한 동경과 열등감 등이 도시적 문화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상실감을 보상받으려 한 것”이라고 하였다. 김명숙(2008)은 박정희 체제에서의 '가족계획 운동'은 “국가가 자신의 목표인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했으나, 가족계획이 매우 사적인 영역인 성의 문제여서 강제성을 사용할 수는 없었으며, 국가동원체제의 강제성으로부터 일정 부분 벗어나는 변형적 하위 국가동원체제”였다고 평가했다.

1970년대 박정희 체제가 국가동원체제를 가동하여 한국가정의 식문화, 주택양식, 성생활 등과 관련한 변화를 꾀하였다는 앞선 연구들의 결과에서 보듯이, 1970년대 한국가정은 박정희 체제의 유지·강화전략이 일상생활에서 관철되는 공간이었다. 특히, 가정의 경제생활 영역은 국가의 경제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영역이자, 여성이 스스로를 효율적 가계관리자인 주부로 교육, 훈련받아야 할 영역이기도 했다. 이 연구가 1970년대 박정희 체제에서의 '가계부적기 운동'을 살펴보려는 이유는 바로 가정의 경제생활이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영역적 특수성 때문이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계부적기 운동'이 나타나게 된 사회, 경제적 배경과 운동의 성격을 밝힌다. 다음으로, 이 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고, 이 운동이 한국가정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반발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과 함께 이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밝힌다.

II. '가계부적기 운동'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성격

한국가정에 가계부와 관련한 담론이 처음 전파된 시기는 근대가정과 관련한 계몽 담론이 본격적으로 유포된 1920~30년대 일제강점기였다. 한형성(2015)은 “1920~30년대 가계부 관련 담론이 식민지 수탈에 따른 가정경제의 파탄 책임을 가정으로 돌리기 위한 일본제국주의의 체제유지 이데올로기인 동시에 계몽지식인들이 한국가정을 근대가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계몽적 의도에서 생산·유통하였다”고 밝혔다. 가계부 담론이 일제강점기에 이어서 다시 주목 받은 것은 박정희 체제에서였다. 1961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체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국가재건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한 <재건국민운동본부>를 만들었다. <재건국민운동본부>는 용공사상을

배격하고, 내핍생활과 근면정신의 고취를 위하여 만든 조직으로,¹⁾ 내핍생활을 위한 실천지침으로 가정주부의 가계부 작성을 적극 장려했다.²⁾

가계부적기가 본격적인 체제동원운동으로 시작된 시기는 한국자본주의가 위기에 놓인 1970년대 초이다. 경제성장률은 1969년 13.8%에서 1970년 7.6%, 1971년 8.8%, 1972년 5.7%로 떨어졌고 부실기업들이 많이 생겼다(김수행·박승호, 2007). 부실기업 문제는 심각하여, 1971년 3월말 현재 은행관리기업으로 전환된 35개 기업에 투입된 시중은행의 대출액과 못 받은 이자액이 각각 671억 원과 125억 원이 있는 상황이었다(박태균, 2013). 또한 경제성장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외화차관이 1966년 500만 달러에서 1969년에는 1억 6,761만 6천 달러로 34배 급증했고, 외화차관을 변제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시중은행으로부터의 융자뿐만 아니라 사채 규모를 급격히 늘려나갔다(박태균, 2013). 박정희 체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1972년 ‘8·3 긴급경제조치’를 시행하였다. ‘8·3 긴급경제조치’의 핵심 내용은 1972년 8월 3일자로 모든 기업 사채의 지불을 동결하고, 모든 사채는 3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전환하거나 기업출자로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8·3 긴급경제조치’는 사채를 기업출자로 전환하여 기업의 재무적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부실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김으로써 유신체제를 지탱하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 준 조치였다(박태균 2013). 박정희 체제는 또한 1970년대 관치금융체제에서 무리한 기업대출로 나타난 은행의 부실화를 막고, 만성적인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 기업들이 국내 은행으로부터 쉽게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저축증진운동’을 강력히 추진했다. 박정희 체제는 ‘저축증진운동’에 있어서 핵심은 가정에서의 소비절약과 내핍생활을 통한 가계저축의 증가라고 보았다. 그리고 가계부를 적도록 장려하는 것이 가계저축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1970년대 ‘가계부적기 운동’은 국내자본 조달을 위한 ‘저축증진운동’과 함께 전개되었다.

1970년대 수출기업의 수익성은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조치들로 좋았지만, 1973년과 1978년의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인한 급격한 물가인상은 대다수 한국가정의 경제상황을 어렵게 하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제 1차 오일쇼크 직후인 1974년 상반기 기업경영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칠백여 업체의 총자본이익률은 73년의 7.9%에서 12.1%로, 자기자본이익률은 30%에서 45.3%로 높아지는 등 수익성이 현저하게 향상됐고 1인당 부가가치생산성은 28%가 늘어난 반면에, 같은 기간 임금수준은 연간 기준 1인당 45만 8천

1) “국가재건최고회의법 공포”, 《경향신문》, 1961년 6월 11일자.

2) “국민운동 제일차 실천사항발표”, 《동아일보》, 1961년 7월 25일자.

원으로 73년에 비해 15.7% 증가에 머물러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비해 8% 포인트나 하회했으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생산액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73년의 32%에서 지난 상반기에는 29%로 낮아졌다.”³⁾ 1976년 국세청 과세자료는 “월급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전체근로자 수 677만 9천명 가운데 74.6%에 해당하는 504만 6천명이 부양가족 수에 따라 3만원~7만원의 소득세 면세점 미만의 극빈층”⁴⁾에 속한다고 했다.

한국은행 총재였던 박승(2010)은 1970년대 경제개발을 ‘인플레이적 경제개발’로 규정하며, ‘인플레이적 경제개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돈을 찍어 내자를 공급함으로써 인플레이를 유발하였다. 한편 인플레이가 되면 채권자와 예금자는 손실을 보고 채무자와 대출 받은 자는 득을 보게 되어 은행 돈으로 공장을 세운 대기업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작용을 한 것이다. 그래서 경제개발과정에서 줄곧 높은 인플레이가 지속되었는데 이것은 서민가계는 압박하고 기업은 혜택을 주는 작용을 한 것이다.

박정희 체제는 오일쇼크와 ‘인플레이적 경제개발’에 따른 물가인상의 책임을 사회만연에 팽배한 과소비풍조와 합리적인 소비를 하지 못하는 주부의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 물가인상에 따른 가정경제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주부의 내핍과 소비절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계부 적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호경기 분위기에 들떠 우리사회 일부에는 불로소득의 허황된 꿈으로 부동산 투기나 환물매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분수를 모르고 사치와 낭비에 흐르는 등 지각없는 풍조가 있다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 이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폐풍은 개인의 장래에도 해로운 일일뿐더러 모처럼 다져진 범국민적 근로의욕과 총화의 분위기를 깨는 분별없는 행동으로서 지탄받아야한다”고 말했다.*⁵⁾

1970년대 관변단체 소속 ‘어용지식인’과 언론도 한 목소리로 주부들의 무절제한 소비가 물가상승을 부추기며, 물가를 잡고 흑자의 가정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부들의 합리적 소비와 절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문학평론가 신동한은 “어렵고

3) “인플레이 이득 기업수익률 대폭 올라 임금상승률은 뒤져”, 《동아일보》, 1974년 12월 28일자.

4) “새해 나라살림과 가계부, 질주하는 경제성장에도 허리띠는 졸라매야하는 현실”, 『여원』, 1978년 1월.

5) “근검·절약정신 슬기롭게 발휘”, 《경향신문》, 1978년 9월 1일자.

가난한 살림살이가 대부분의 가정을 차지하는 실정에서 먼저 강조되었어야 하는 것은 금욕을 바탕으로 한 검약과 절제의 정신”⁶⁾이라고 했으며, 〈저축추진중앙위원회〉 부회장 전병원은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은 주부들의 게으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근의 슈퍼마켓에 전화를 걸어 달걀 한 줄까지 배달을 부탁하는 것이 당장에 편할지는 모르지만 바로 이러한 행위가 소비를 불건전하게 만드는 주범”⁷⁾이라고 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 자문위원 이열모는 “노동대가인 임금이 오를 때에 상품 값이 오른다는 것은 자명한 사리에 속한다”⁸⁾며 노동자의 임금인상 억제를 강조하였다.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성두는 “도대체 사회가 너무나 낭비적인 분위기로 휩싸여 있고 낭비를 조장하는 책동이 난장판을 이루고 있다. 진종일 라디오·텔레비전에서 귀가 따갑도록 울려오는 해변의 찬가, 해변의 유혹이 안 가고는 못 견디게 육박하는 것이다. 누구네는 해운대로 날고 아무개 네는 경포대로 달렸으며 금순네는 일가족이 제주도도 갔다는 등 모이면 재잘대는 이웃의 사발통이 못 가는 심정민들의 불행감, 빈곤의식을 얼마나 자극하고 있는 것인지도 문제인데다가, 그로 인해 자원이 낭비되며 물가가 치솟고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을 탕진하는 등 폐단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⁹⁾며, 과소비적인 사회풍조가 물가인상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현대경제일보〉 논설위원 현경득은 “반유신적 소비지출을 억제하는 것만이 적자가계를 이기는 유일한 길”¹⁰⁾임을 주장하였다.

언론에서는 한국주부들이 가정의 경제생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구주부들에 비하여 ‘열등한’ 존재이며, 가계부를 적음으로써 한국주부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선전하였다.

한 푼이라도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다면 천리길도 멀다 않고 달려간다는 일본 여인들의 알뜰함. 한 가지 물건을 사기 위해 적어도 세 군테의 가게를 들른다는 프랑스의 주부들. 기분 내키는 대로 충동구매를 서슴지 않는 우리네의 버릇.¹¹⁾

가계부를 쓰는 주부들은 수입액으로 살 수 있는 최상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 하는 패턴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선진

6) “금욕의 정신”, 『여원』, 1974년 11월.

7) “저축은 인격도야의 지름길”, 《경향신문》, 1979년 2월 24일자.

8) “고물가시대를 사는 주부의 지혜”, 『여원』, 1970년 3월.

9) “낭비합시다, 저축합시다”, 『여원』, 1977년 10월.

10) “적자가계를 이기는 지혜”, 『여원』, 1975년 3월.

11) “소득 앞지르는 소비풍조 물가안정이 열쇠 인플레이션 망령 쫓는 비방이 잇달아 터지는데”, 《경향신문》, 1978년 9월 1일자.

국 가정의 가장 바람직한 생활수준은 1주일에 두어 번 맛있는 음식을 먹고 1년에 몇 번 외출, 외식을 하고 어떤 집에서 산다는 것이 구체화되어 있다. 이에 비해 우리 주부들은 턱없이 가난한 살림살이에서도 사치스런 피복비와 집기, 과다지출의 교육비, 체면치레의 경조비, 거기에 견물생심적인 욕심으로 사들이는 쓸 데 없는 물건값 등이 지출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겠다.¹²⁾

1970년대 '가계부적기 운동'에 내재한 주부담론은 가정에서의 저축이 '얼마나 버는냐'는 소득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쓰느냐'는 소비의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저축의 책임은 소득을 벌여 오는 '남성가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림을 맡은 '여성주부'에게 있는 것이다. 즉, 가정에서 저축을 못 하는 이유는 살림을 맡은 여성주부의 합리적이지 못한 소비성향 때문이며, 이러한 여성주부의 소비성향을 국가의 이름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적기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성저축생활중앙회가 마련한 강연회에서 서울대 이현재 교수는 주부들의 바람직한 가정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중략) 요즈음 남녀평등문제와 함께 부업에서의 해방을 운위하는 여성해방운동이 일고 있다. 그러나 남녀평등과 남녀기능의 차이는 다른 것으로 주부의 기능은 바로 주어진 소득으로 가계를 잘 꾸려나가는 것이다. 서구의 경우도 사회관습상 남성이 여성을 자상히 돌봐준다는 것뿐이지 전통적인 남자 중심사회는 어쩔 수 없다. 아침부터 식모나 호령하고 낮잠이나 즐기며 친구를 만나 음식을 먹고 돌아와 식모에게 저녁식사를 차리게 하는 유한주부는 상상도 할 수 없다. 주부란 동·서양 똑같이 「실현되는 소득관리자」인 것이다. 우리주부들도 부업에서의 해방 운운할 게 아니라 참된 주부로서의 자세를 갖추는 게 건실 가정을 위한 선결문제다. 자녀의 성장, 남편의 정년을 생각해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한 달 동안 가계를 과탄 없이 영위하기 위한 「가계생활의 계획화」를 실천해야 한다. 이 계획이란 문제에서 생각나는 점은 가계부이다. 가계부는 사후기록만으론 무의미하다. 수입한 도 내에서의 지출을 위한 사전계획이 되어야한다.¹³⁾

따라서 1970년대 가정경제에서의 적자로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인플레이적 경제개

12) "주부의 지혜", 《경향신문》, 1975년 11월 24일자.

13) "건실한 가정", 《경향신문》, 1973년 2월 2일자.

발'로 물가상승을 가져온 국가도, '쥐꼬리' 같은 월급을 가져오는 남편도 아닌, 오롯이 살림을 잘못하여 주부로서의 자격이 없는 여성 자신인 것이다. 즉 살림을 못하는 주부는 주부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며, 가계부는 살림 잘 하는 주부의 필수적 상징물이 되었다.

1970년대 '가계부적기 운동'의 성격을 요약하면, 이 운동은 한국자본주의의 위기에서 국내자본조달을 위한 '저축증진운동'에 수반된 운동인 동시에 1970년대 '인플레이션 경제개발'과 오일쇼크에 따른 물가인상, 그리고 이에 따른 대다수 한국가정의 경제적 위기를 주부의 책임으로 내면화하는 주부담론을 생산·유포한 운동이었다.

Ⅲ. '가계부적기 운동'의 전개

박정희 체제는 1970년대 가정소비를 억제하고 가계저축을 늘리기 위하여 '저축증진대법'을 제정하고 '가정의례준칙'을 개정했다. '저축증진대법'은 1970년 "저축의 증대에도도함으로써 내자의 동원을 원활히 하여 저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동법 1조)" 제정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재무부 장관이 내자동원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이나 사업장 가릴 것 없이 모든 지역적, 직장별 단위에서 저축조합의 조직과 가입을 명령하고 저축금액을 지정할 수 있다(동법 13조 4항, 14조 1항)"는 것이다. 이 법의 제정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신민당과 주요 언론들은 강한 반대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저축증진대법'이 '강제저축'을 법적으로 용인하고 '관계금융'을 부추기는 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공화당 단독으로 변칙통과 되었다.

박정희 체제는 가계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1969년에 만들어진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을 1973년에 개정했다. 개정 이유는 이 법을 실효성 있는 강제규정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개정안에는 '청첩장 또는 부고장의 개별 고지', '2개 이상의 화환, 화분 이와 유사한 장식물의 진열 또는 사용', '답례품의 증여', '굴건제복의 착용', '만장의 사용', '경조기간 중 주류 및 음식물의 접대'와 같은 6개 사항들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했다.

1970년대 '저축증진운동'과 '가계부적기 운동'은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는 관변 민간단체인 <저축추진중앙위원회>와 <여성저축생활중앙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였다. 이러한 민간단체들이 '저축증진운동'과 '가계부적기 운동'에서 중심역할을 한 이유는 '강제저축'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저축추진중앙위원회〉는 1969년에 “저축을 늘리기 위하여 금융단, 보험단, 경제단체, 민간단체, 사회저명인사로 구성”¹⁴⁾되었고, 저축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활동들, 보기를 들어 가계부 무료 배부, 잡지 『열매』 발간, 저축 관련 만화, 생활수기, 노래¹⁵⁾ 등을 제작하였고, ‘저축의 날’¹⁶⁾을 주최하였다.

〈여성저축생활중앙회〉는 〈저축추진중앙위원회〉보다 2년 앞선 1967년에 9월 1일에 재무부와 금융단의 후원아래 당시 서울대 가정과 교수였던 현기순을 회장으로 하여 만들어진 여성단체이다. 〈저축추진중앙위원회〉가 주로 저축관련 교육에 힘썼다면, 〈여성저축생활중앙회〉는 여성저축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가계부 무료 배부와 교육, ‘가계지출모형’을 통한 소비절약캠페인, ‘알뜰한 주부’ 선정을 통한 주부담론의 생산과 유통에 집중하였다. 언론에서는 〈여성저축생활중앙회〉의 창립배경과 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여성의 계모임을 은행적금으로 끌어들이기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한 여성단체가 일 년 동안 삼십일만 구천 팔백여개의 여성적금구좌를 트게 했고 그 계약고는 일백이십오억 칠천여만원에 달하게 했다. 이러한 수자의 성립은 계 일변도로 자금을 저축하고 마련하던 여성들이 적금으로 전환 또는 적금과의 병행으로 계를 처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런 경향을 수자로 밝혀준 곳은 여성저축생활중앙회(회장 현기순), 지난 이십육일 세 돌잔치를 은행집회소에서 가진 여성저축생활중앙회는 이런 수자는 조직을 통해서만 가능했다고 고충담을 털어놓는다.

1967년 설립 당시만 해도 여성들 간의 저축방법은 계뿐이었다. 이것이 치맛바람과 결부되고 가끔 계 깨어지는 연쇄소동이 일어나 여성은 계와 더불어 사회문제로 대두될 정도였다. 이러한 시기에 조직을 착수, 십일 개 시도에 지부를 만들고 시군면에 까지 파고들었다. 서울에도 일백십 개의 동 조직을 했다.

14) “저축추진중앙위 창립”, 《매일경제》, 1969년 2월 21일자.

15) 〈저축추진중앙위원회〉가 1970년대 LP판으로 제작·보급한 저축의 노래(작사 박목월, 작곡 나운영, 노래 봉봉사중창단, 이시스터즈)의 1절 가사는 다음과 같다. “알뜰히 살아보세 힘써 일하고 / 한푼을 아껴 쓰면 늘리어 보세 / 허공에 뜬 행복을 잡으려 말고 / 푼푼이 모아 모아 쌓아 올리세 / (후렴) 티끌도 모이면 태산이 된다네 / 우리도 아껴 모아 잘 살아보세.”

16) ‘저축의 날’은 1964년에 생겼으며, 1973년 이전에는 추수기를 전후한 매년 9월 25일에 있었으나 1973년부터 매년 10월 25일로 변경하였다. 1969년 〈저축추진중앙위원회〉 창립 이전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였으나, 1969년에는 박정희가 직접 ‘저축의 날’ 행사장에 참석하여 그 위상이 높아졌다.

소그룹과 같은 이들 조직을 통해 먼저 생활합리화운동을 전개했고 그 합리화의 한 방법으로 가계부적기 운동을 벌인 것이다. 가계부를 나눠준 후 올바르게 적는 법을 강습하고 다시 이것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으로 알뜰한 주부상에 응모케 했다. 이렇게 응모해온 가계부를 검토,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게 적힌 가계부의 주인공을 골라 알뜰한 주부로 포상도 했던 것이다. 이 알뜰한 주부의 자격에 저금통장 지참을 큰 요건으로 한 것은 물론이다. 이렇게 해서 여성의 저금통장지참에는 큰 몫을 했다.¹⁷⁾

〈저축추진중앙위원회〉, 〈여성저축생활중앙회〉 그리고 『여원』 등의 여성지들이 ‘가계부적기 운동’과 관련하여 진행한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계부 배부

가계부는 주로 〈여성저축생활중앙회〉와 은행 등의 금융기관들이 제작하여 무료 배부했으며, 『여성동아』, 『여원』, 『주부생활』, 『여성중앙』와 같은 여성지들도 신년호의 별책부록으로 가계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1970년대 초 가계부 배부 수량은 〈여성저축추진생활중앙회〉가 약 22만부, 여성지들은 약 26만부였으며, 1979년 배부 수량은 〈여성저축생활중앙회〉가 약 46만부, 여성지들은 약 100만부를 배부”¹⁸⁾했다. 가계부 제작 부수는 매년 늘어나 1979년 말에는 대략 4~5가구당 1부 정도로 가계부가 배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성저축생활중앙회〉가 만든 가계부는 ‘도시용’과 ‘농촌용’ 두 종류였다. “도시가정용은 도시중심 예산지출을 항목에 넣었으며, 일년, 삼년 계획의 저축을 권하고 있는 데 반하여 농가의 것은 팔십 페이지로 농사메모와 함께 생활의 지혜,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예금소개를 비롯하여 생산물 소비재고 일람표를 따로 만들었다. 특히 농촌용은 날짜를 박지 않아서 매일 현금을 지출하지 않는 농촌의 사정을 감안”¹⁹⁾하였다. 여성지들이 만든 가계부는 단지 가정경제의 기록 용도로만 그치지 않고, 요리법, 생활상식, 살림정보, 전화번호, 가족 친지의 기념일, 일기를 겸한 간단한 메모 등도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이외에도 〈저축추진중앙위원회〉는 “어린이들에게 용돈의 계획적인 사용과 계수의 생활화 습관을 길러주고, 특히 여자 어린이들의 경우 장래 주부로서의 가계부 기입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주기 위하여 용돈기입장 2만부를 만들어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 보급”²⁰⁾하였다.

17) “늘어가는 여성적금”, 《동아일보》, 1970년 9월 29일자.

18) “가계부 알뜰한 살림의 조연자”, 《동아일보》, 1969년 12월 4일; “여성지 신년호 화려한 가계부”, 《동아일보》, 1979년 12월 14일자.

19) “알뜰한 살림 가계부 속에”, 《동아일보》, 1971년 12월 10일자.

2. '가계지출모형' 개발

1968년 <여성저축생활중앙회>는 지출항목별로 수입의 얼마를 지출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소득수준별로 보여주는 '소득별 가계지출모형'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여성저축생활중앙회>가 '가계지출모형'을 만든 이유는 "가계부를 쓰다가 그만 둔 주부 중에서 48%가 예산 세우기가 너무 어려워서 가계부 적기를 중단하기"²¹⁾ 때문에 주부들이 가정예산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 이유는 저축증진을 위해서 가정의 지출을 전국적 차원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었고, '가계지출모형'이 가계지출에 대한 '국가적'이고 '전국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리라는 생각이었다.

'가계지출모형'은 초기에는 일 년에 한 차례 발표되었지만, 1973년 10월부터는 일 년에 두 차례씩 당시 물가수준에 근거한 '가계지출모형'이 발표되었으며, 물가가 급격히 변할 때는 수정된 '가계지출모형'이 발표되었다.²²⁾ <여성저축생활중앙회>의 '가계지출모형'은 발표될 때 마다 대부분의 일간지와 여성지에서 기사화되어, '알뜰한 주부'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가계지출의 가이드라인으로 선전되었다.

<표 1>은 <여성저축생활중앙회>가 1974년 6월에 발표한 '가계지출모형'이다. 월수입 50,000원에 두 자녀를 가진 가정의 경우, 식비지출을 수입의 40%인 20,000원으로 제한하였다. 교육비로는 1,950원을 쓰며, 네 식구가 방을 하나만 사용하여 연탄, 석유 등의 주거광열비를 3,650원으로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교통통신비 2,450원, 의료비·약값·목욕비·이발비 등의 보건의생비 4,280원, 전기·수도·세금 등의 공과금 1,270원, 피복비 4,500원, 영화관람비·도서비·종교활동비 등의 문화교제비에 1,900원, 잡비에 4,000원을 쓰며, 수입의 12%인 6,000원은 저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여성저축생활중앙회>가 1974년 6월에 제시한 '가계지출모형'이 실제로 당시 한국 가정에서 얼마나 타당했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월수입 5만원에 부부와 8살, 6살, 4살의 세 자녀를 둔 박정자씨 가정의 1974년 6월 당시의 가계부를 입수하여

20) "저축추진위서 용돈기입장 보급", 《매일경제》, 1972년 5월 12일자.

21) "소비예산 생활의 지침역할", 《매일경제》, 1978년 7월 13일자.

22) 보기를 들어, 1973년 10월에 물가지수에 근거한 '가계지출모형'을 발표했음에도, 1973년 제 1차 오일쇼크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하자 서둘러 1974년 1월 물가기준에 근거한 새로운 '가계지출모형'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1974년 1월에 만든 '가계지출모형'도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 때문에 1974년 2월에는 벌써 무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월에 만든 가계모형 벌써 무용", 《동아일보》, 1974년 2월 4일자.

지출항목별로 분석하였다. <표 2>는 이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표 1> 여성저축생활중앙회의 소득별 가계지출모형(단위: 원)

가계와 가족구성비목		부부·어린이 2세·5세 3만5천원	부부·어린이 5세·8세 5만원	부부·어린이 12세·14세 8만원	부부·어린이 15세·17세 10만원
저축		4,530 (13%)	6,000 (12%)	9,600 (12%)	12,000 (12%)
식비	주식	4,840	4,840	5,750	6,500
	부식	6,900	11,130	14,630	18,000
	조미료	1,610	2,030	3,020	3,500
	간식	1,000	2,000	3,000	3,000
	합계	14,350 (41%)	20,000 (40%)	26,410 (33%)	31,000 (31%)
교육비	미취학	650	1,950		
	국민학교			1,950	
	중학교			5,110	5,110
	고등학교				6,930
	합계	650 (1.9%)	1,950 (3.9%)	7,060 (8.8%)	12,040 (12%)
주거광열비		2,800 (8%) 방 1개 사용	3,650 (7.3%) 방1개 사용	6,850 (8.6%) 방 2개 사용	9,970 (9.8%) 방 3개 사용
교통통신비		2,450 (7%)	2,450 (4.9%)	5,350 (6.6%)	6,970 (7%)
보건위생비		3,100 (8.8%)	4,280 (8.6%)	5,560 (6.8%)	5,900 (5.9%)
공과비		420 (1.2%)	1,270 (2.5%)	2,420 (3.2%)	3,070 (3.1%)
피복비		2,800 (8%)	4,500 (9%)	6,700 (8.4%)	7,500 (7.5%)
문화교제비		1,400 (4%)	1,900 (3.8%)	3,050 (3.8%)	3,750 (3.7%)
잡비		2,500 (7.1%)	4,000 (8%)	7,000 (8.8%)	8,000 (8%)

출처: “수입 12% 이상은 저축토록”, <<경향신문>>, 1974년 6월 14일자.

〈표 2〉 박정자씨 가정의 1974년 6월 가계지출 내역²³⁾ (단위: 원)

비 목		금 액	비 중	비 고
총 수입액		50,000	100%	
식비	주식	12,060		쌀
	부식	3,505		생선, 두부, 채소, 라면, 국수, 육류 (돼지고기 1회 450원)
	조미료	1,810		과, 마늘, 생강, 양파, 간장, 설탕, 기름 등
	간식	2,835		라면땅, 하드, 우유, 빵(주식 대용), 과일(월 2회)
	소계	20,210	40.42%	
교육비		2,545	5.09%	국민학생 자녀 육성회비(1,200원), 책장(1,300원)
주거광열비		2,030	4.06%	연탄, 숯, 양초, 성냥
교통통신비		120	0.24%	버스비, 공중전화비
보건위생비		1,005	2.01%	목욕비, 비누, 치솔, 자녀 약값 200원
공과비		1,360	2.72%	오물세, 전기세, 수도세
피복비		1,260	2.52%	자녀구두, 남편·자녀 내의
문화교제비		2,070	4.14%	학부모 모임(1회), 절 시주 1,970원
잡비		3,920	7.84%	남편 용돈 3,350원, 자녀 용돈 70원, 꽃 500원
부채 관련		14,695	29.39%	외상 395원, 원금 상환 6,300원, 이자 8,000원
총 지출액		49,215	98.43%	
이익		785	1.57%	

출처: 박정자씨 1974년 가계부

박정자씨 가정은 1974년 6월 현재 총 수입액 50,000원에 총 지출액은 49,215원이

23) 박정자씨는 가계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월별 예산을 세워서 지출항목별로 금액을 기록하고 월말마다 결산을 하기 보다는 지출 위주로 가계부를 작성하였다. 이는 남편이 중장비 건설기계를 이용한 건축업에 종사한 관계로 매월 수입이 일정치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표 2〉는 박정자씨의 1974년 6월 가계부 지출내역들을 〈여성저축생활중앙회〉의 '가계지출모형'과 같은 형식으로 재분류하여 정리한 표이다.

었다. 식비는 총 지출액의 40.42%로 ‘가계지출모형’의 권장 수준인 40%에 근접한다. 그러나 박정자씨 가정의 식비지출에서 라면, 국수 등의 면류는 월 3회, 빵과 우유는 각각 월 8회와 5회 지출한 것으로 볼 때, 삼일에 최소한 한 끼 정도는 분식으로 식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육류는 돼지고기 구입이 월 1회에만 그친 점을 볼 때, 가정의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육류 섭취를 자제해야만 ‘가계지출모형’의 식비 권고수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방 1개를 빌려서 주로 연탄 난방을 하였던 박정자씨의 주거광열비는 ‘가계지출모형’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6월이라는 계절적 특성이 반영되었으며, 겨울의 주거광열비는 이보다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오물세, 전기세, 수도세 등의 공과금은 1,360원으로 ‘가계지출모형’의 수준과 비슷하였다. 피복비는 자녀 구두와 가족들 내의만을 구입하는 데 1,260원을 지출한 것으로 볼 때, 만약 계절별로 남편과 부인의 외출복을 구입한다면 ‘가계지출모형’의 4,500원은 쉽게 초과할 것이다. 박정자씨의 보건위생비 1,005원은 월 한 차례 목욕과 비누·치약 구입 그리고 자녀 약값에 지출된 금액이다. ‘가계지출모형’에서 책정된 보건위생비는 4,280원이다. 이는 <여성저축생활중앙회>의 ‘가계지출모형’이 가족 구성원 모두 다 건강한 상태를 가정하여 만든 것으로,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건강이 안 좋아 병원신세를 지게 되면 적자가계는 필연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박정자씨의 문화교제비에서 특이한 점은 ‘절 시주’와 같은 종교 활동에 대부분을 지출했으며, 영화관람·여행·도서구입·취미활동과 관련한 지출에는 단 1원도 쓰지 않은 것이다. 즉, 1970년대에는 박정자 씨와 같은 중산층 가정도 사회적 교제와 여가생활에는 거의 지출여력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정자씨 가정의 지출내역이 <여성저축생활중앙회>의 ‘가계지출모형’과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박정자씨 가정이 가계부채 때문에 저축을 할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다. 박정자씨는 월 수입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14,695원을 부채에 대한 원금상환과 이자로 지출했으며, 이 때문에 당시 한국주부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계’도 가입할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974년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차입금 규모가 연간 소득의 10% 미만인 경우가 전체 표본의 77%이고 10~15%가 13.9%, 15% 이상이 15.5%”²⁴⁾이었다. “돈을 꾸는 목적은 생활비 충당이 38%, 자녀교육이 15.2%, 질병치료 12%, 부채청산 10.1%, 부동산 매입 또는 가옥의 신축 및 수리가 9%, 결혼 등 관혼상제 비용 5%, 가구, 전기제품, 의류 등의 월부 지불 3.4%, 기타 7.4%”²⁵⁾이었다.

박정자씨 가정의 사례를 보면, <여성저축생활중앙회>의 ‘가계지출모형’은 당시의

24) “우리네 서민은 왜 빚을 지나”, 《동아일보》, 1974년 1월 17일자.

25) “우리네 서민은 왜 빚을 지나”, 《동아일보》, 1974년 1월 17일자.

한국가정이 최대한의 소비억제와 내핍생활을 통해서만 지킬 수 있었던 모형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실제로 하루가 다르게 뛰어 오르는 물가와 가계부채로 인하여 대다수 한국가정에서는 '가계지출모형'의 권고안을 지키기 힘들었으며, 저축은 고사하고 적자를 벗어나기도 힘들었다. <여성저축생활중앙회>의 '가계지출모형'은 1970년대 '인플레이적 경제개발'과 오일쇼크에 따른 물가인상, 그리고 물가인상에 따른 가정경제의 파탄 책임이 정부가 아니라, 국가적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알뜰하지 못한 주부'의 책임이라는 주부담론을 생산하여 유포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3. '알뜰한 주부상' 선정

<여성저축생활중앙회>는 가계부를 적은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알뜰한 주부상'을 선정하여 시상했다. 1968년 제1회 대회에서는 최고상인 특상의 상금이 5만원이었지만 1979년에는 50만원으로 늘렸으며, '알뜰한 주부상'에 참가하는 주부들도 1970년대 초 100여명 주부에서 1979년에는 500여명의 주부들로 증가했다. 육영수는 매년 '알뜰한 주부상'에 선정된 주부들을 청와대로 초대하였고, 주요 대중매체에서도 수상소식과 수상자들의 사례가 보도되었다. 『여원』에서도 1968년부터 '살림 잘하는 주부상'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여원』은 사고(社告)를 통해서 '살림 잘하는 주부상'이 "우리나라 여성들 중에 제일 알뜰하고 보람 있는 주부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이 주부상 제도를 선언함과 더불어 펼쳐진 가계부적기 운동은 이제 전국 고을마다 번져 우리나라 주부들의 살림솜씨는 한층 더 알뜰해졌고, 여원가계부와 규모 있는 살림살이를 서술한 수기를 보내주면 선정하여 최우수상에는 상금 20만원과 상품권으로 된 부상을 준다."²⁶⁾고 밝혔다.

<여성저축생활중앙회>는 '알뜰한 주부상' 이외에도 '주부백일장'을 개최하거나 가계부적기와 관련한 강좌를 개설했다. <여성저축생활중앙회>는 1975년부터 "글을 써서 우열을 가리지는 백일장이 아니라, 누가 더 부지런하게 절약하고 저축하여 사는가를 경쟁"²⁷⁾한다는 취지로 '주부백일장'을 개최하였는데, 백일장 주제는 '우리집', '가계부', '저축하는 마음' 등이었다. 또한,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가정경제운영의 방향' '가계부 기입지도' 등의 주제로 가계부적기와 관련한 강좌들을 수시로 열었다.²⁸⁾

가계부에 대한 학교교육도 있었다. 당시 "고교 입시 시험의 총점 180점 가운데 가정 과목의 배점이 25점으로 적지 않은 비중이었고, 가정 과목에서 해마다 가장 많이

26) "여원사 제정 제 3회 살림 잘하는 주부상 마감 박두", 『여원』, 1970년 1월.

27) "알뜰주부상 시상 여성저축생활중앙회", 《매일경제》, 1979년 3월 21일자.

28) "가계부 지도강습회", 《경향신문》, 1972년 11월 28일자.

출제되는 부분이 실생활과 관련한 부기”²⁹⁾이었기 때문에 중학교에서도 가계부적기 교육이 이루어졌다. <여성저축생활중앙회>는 전국의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계부 적는 방법을 지도하기도 했다.³⁰⁾

IV. ‘가계부적기 운동’의 효과와 반발

박정희 체제는 ‘가계부적기 운동’을 가계저축을 늘리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았다. 한국은행이 1970년 전국 31개 지역 4천 5백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 “가계부를 적는 사람 중에서는 58.2%가 정기적금을 하고 있으나 안 적는 사람 중에서는 22.4%가 정기적금을 하고 있었으며”³¹⁾, “가계부 보급지역의 저축률이 가처분소득 대비 10.9%인 데 반하여 가계부 미 보급지역의 저축률은 9.8%”³²⁾이었다. ‘저축증진운동’과 함께 진행한 ‘가계부적기 운동’으로 가계부를 적는 가구의 수도 증가하여, 한국은행의 같은 조사에서 “조사대상 가구의 51.7%가 가계부를 적고 있음이 나타났으며, 이는 2년 전의 44.2%보다 7.5%가 증가”³³⁾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희 체제는 한국가정에서 가계저축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비지출 패턴의 불건전, 일부 중산층 및 고소득층간의 사치 향락적 소비행위, 전시효과적인 소비”³⁴⁾를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가계의 불필요한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운동이 ‘가계부적기 운동’이라고 보았다. 박정희는 새마을운동 지도자와 관계 장관들에게 농가소득향상 관련 훈시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농가소득이 늘면 관광을 다닌다, 냉장고를 산다는 등 소비가 많아지게 되는데 집을 짓기 위해 부금을 내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어들게 되어 다목적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수입이 늘면 소비가 늘어나는 것인데 소비를 저축으로 유도하여 주택개량사업 등에 쓰도록 권장하시오. 관광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³⁵⁾

29) “만점 진학교실(6) 다가선 고교입시-과목별 총 정리 실과”. 《경향신문》. 1973년 12월 10일자.

30) “알뜰주부상 시상 여성저축생활중앙회”, 《매일경제》, 1979년 3월 21일자.

31) “주부 경제교실 (1) 가계부의 정리”, 《경향신문》, 1970년 7월 16일자.

32) “가계부는 저축을 기른다” 《동아일보》, 1970년 12월 15일자.

33) “주부 경제교실 (1) 가계부의 정리”, 《경향신문》, 1970년 7월 16일자.

34) “내자동원 극대화 위해 새해 범국민 저축운동”, 《동아일보》, 1973년 10월 25일자.

35) “소비 줄여 주택개량토록”, 《동아일보》, 1977년 12월 14일자.

박정희는 가정에서 저축을 못하는 것이 부족한 소득 때문이 아니라 무절제한 소비 때문이며, “계속적인 소비억제 및 소비합리화운동의 전개만이 이런 반(反)저축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길”³⁶⁾이라고 보았다. 이는 1970년대 ‘가계부적기 운동’의 핵심이 소비절약과 내핍을 통하여 저축을 늘리는 운동이었음을 의미한다.

〈표 3〉은 1970년대 가계저축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가계저축률을 보여 주고 있으며,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저축증진운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표 3〉 1970년대 가계저축률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표 3〉에서 가계저축률이 1972년까지는 6% 미만이다가 1973년에는 11.5%로 약 2배 가까이 저축률이 상승했다. 저축률 상승요인은 1973년부터 강력하게 추진된 ‘저축증진운동’ 때문이며,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1972년에 있는 ‘8.3 조치’에 의한 효과로 보인다. ‘8.3 조치’는 가정의 여유 자금을 계(契)로부터 저축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8.3조치 이후 목돈의 이용으로 가장 성행해 왔던 사채 문제가 안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알뜰히 저축한 얼마간의 목돈을 그냥 늘릴 수 없는 주부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장롱 밑에 넣어 둘 수만은 없으니까. 이런 점에서 가장 안전한 목돈 이용은 역시 은행을 첫째로 손꼽을 수 있다.³⁷⁾

박정희 체제는 한국가정에서 저축을 방해하는 가장 큰 ‘암초’ 가운데 하나가 계(契)라고 생각했다. 1970년 한국은행의 조사에서도 “저축을 하지 않는 이유가 여유가 없기 때문”(73.6%)이라는 응답 다음으로 “계에 가입했기 때문”(24.8%)³⁸⁾이라는

36) "소비 줄여 저축증대를 한은조사 가구별 저축 실태 내용", 《매일경제》, 1974년 1월 11일자.

37) "8.3조치를 계기로 이렇게 생각하자", 『신여원』, 1972년 10월

38) "주부 경제교실(2) 알뜰한 살림을 위한 저축", 《경향신문》, 1970년 7월 23일자.

응답이 많았다. 따라서 박정희 체제는 관변 지식인들을 동원하여 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다. 언론인 김두완은 “계가 패가망신에 이르는 주부들의 부질없는 과욕의 산물”이며, “계를 든 주부는 그것이 크고 작던 간에 부금을 조달해야만 되는 가장이나 다른 가족에게 항시 불안한 심적 부담을 안겨주는 누를 범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계에서 조성되는 자금은 거의가 음성화하여 사장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만큼 산업발전에 동원되어야 할 민족자본이 빛을 못보고 암적 요소로 작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³⁹⁾ 〈전국경제인연합〉 이사인 신용선도 ‘계, 필요악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계는 악용자가 많으며, 인간관계를 나쁘게 할 요소가 다분하며,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음성적 유통”⁴⁰⁾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부인회〉 이사 장영교는 “은행문턱이 높아져 마땅한 담보물이나 보증인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은행을 이용할 수 없고 대신 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⁴¹⁾며, 국민들이 저축을 많이 하면 은행도 대출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은행이 서민층 더러 저축을 해라, 그러면 대출도 해 주마, 해서야 되겠습니까. 먼저 대출을 해서 장사할 밑천도 주고, 학자금 할 돈도 준 다음 저축을 하라고 해야죠. 은행이 돈이 없어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액의 용자를 못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큼직큼직한 기업체들에게 수십억씩의 용자를 해 주고 사고가 나는 예는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많이 보아 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은행은 코 문은 서민의 돈은 대수롭지 않고 서민층은 고객으로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저 대기업체라야 허리를 굽실거리고 용자도 불쑥불쑥 잘 해 주죠.⁴²⁾

〈표 3〉에서 1970년대 한국가정의 저축률은 1973년에 크게 상승했다가 1974년과 1975년에는 각각 9.8%, 7.2%로 하락하는 데, 이는 1973년 10월에 있었던 제 1차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1978년 17.6%로 정점에 도달했던 가계저축률이 1979년과 1980년에 다시 급격히 감소하는 데, 1978년 말과 1979년 초에 있었던 제 2차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보인다. 〈표 3〉은 1970년대 한국가정의 저축률이 상승하다가 급격히 감소한 이유가 한국가정의 무절제한 소비 때문이 아니라 두 차례의 오

39) “여성 10계 제8장 계를 저축으로 이는 주부 패가망신에 이르는 부질없는 과욕” 『여원』, 1975년 4월.

40) “계, 필요악인가?”, 『여원』, 1975년 11월.

41) “계, 필요악인가?”, 『여원』, 1975년 11월.

42) “계, 필요악인가?”, 『여원』, 1975년 11월.

일쇼크로 인한 급격한 물가인상과 가정 경제생활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이 1974년 전국 91개 지역의 6,142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월 2만원 미만의 소득계층가구에서는 저축하는 가구 비율이 21.8%에 지나지 않았으나 월 3~4만원 소득계층에서는 70.6%, 월 10만원 이상 소득계층은 98.1%가 저축을 하는 것”⁴³⁾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축을 하지 않는 이유가 ‘생활비 대기에 바빠서’가 54.4%로 압도적인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계나 이자놀이’와 ‘차입금 상황’이 각각 9.5%이었다.⁴⁴⁾

〈여성저축생활중앙회〉와 같은 관변 민간단체의 활동과 언론매체의 홍보로 확산되어 가던 ‘가계부적기 운동’도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점차 운동의 한계를 보였다. 1970년 한국은행의 전국 31개 지역 4,500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전체 가구의 51.7%가 가계부를 적었다.⁴⁵⁾ 그러나 1976년 서울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연구실이 기혼남자 사무직원 153명과 일반가정주부 2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주부의 가정관리실태 조사’에서는 가계부를 꼬박꼬박 적는 주부가 25.8%로 감소하였다.⁴⁶⁾ 〈여성저축생활중앙회〉가 1973년과 1979년에 각각 1,000명과 2,3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가계부를 적는 가구가 감소하였다. 〈표 4〉는 〈여성저축생활중앙회〉의 1973년과 1979년의 분석결과를 요약한 표이다.

〈표 4〉에서 1973년에는 조사대상자의 84%가 가계부를 적었으나, 6년 후인 1979년에는 조사대상자의 72.6%가 가계부를 적는다고 밝혀 가계부 적는 가구가 12% 포인트 감소하였다.⁴⁷⁾ 그리고 가계부를 적지 않는 이유가 1973년에는 “가계부의 필요성은 느끼나 실천이 잘 안되어서”가 가장 큰 이유였지만, 1979년에는 “가계부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이유가 56.2%를 차지하고 있다. 즉, 생활비 부담 증가로 인하여 저축을 할 경제적 여유도 없

43) "소비 줄여 저축증대를 한은조사 가구별 저축 실태 내용", 《매일경제》, 1974년 1월 11일자.

44) "소비 줄여 저축증대를 한은조사 가구별 저축 실태 내용", 《매일경제》, 1974년 1월 11일자.

45) "주부 경제교실(1) 가계부의 정리", 《경향신문》, 1970년 7월 16일자.

46) "자녀교육에 가장 보람", 《동아일보》, 1976년 11월 5일자.

47) 〈표 4〉의 〈여성저축생활중앙회〉의 분석결과를 살펴 볼 때 유의할 점은 관변단체가 자신의 활동성과를 과대포장하기 위하여 통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순옥(2004)은 1970년대 정부와 노동부문의 많은 통계자료가 왜곡되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표 4〉에서도 1973년과 1979년에 각각 응답자의 84%와 72.6%가 가계부를 작성했다는 〈여성저축생활중앙회〉의 분석결과는 과장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1970년대에 가정생활을 했던 70~80대의 노년층 132명을 대상으로 하여 1970년대에 가계부를 적은 경험이 있는지를 설문조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29.54%에 해당하는 39명만이 가계부를 적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었으며, 적자가계가 지속되어서 가계부를 적을 동기와 필요성도 못 느꼈다는 것이다.

〈표 4〉 〈여성저축생활중앙회〉의 ‘가계부적기 운동’ 조사 결과

조사항목	1973년	1979년
가계부 작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84%) •미작성(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72.6%) •미작성(27.4%)
가계부 기록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합리화(54.1%) •살림의 지출내용 파악(42%) •불필요(3%) •모르겠다(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생활규모 파악과 합리적 생활(74.1%) •남편의 권유(11.1%) •가계부 입수(7.6%)
가계부 기록 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비목별로 예산을 자세히 세운다 (40%) •그날의 총 지출액만 어렵잡는다 (37.8%) •적자가계여서 예산을 세우 않게 된다 (11.5%) •기타(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전한 전용가계부 이용 (44%) •시중에서 파는 금전출납부 (32.4%) •기타(20.8%)
가계부를 기록하지 않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필요성은 느끼나 실천이 잘 안되어서(39.7%) •적자가계이므로 적고 싶지 않아서 (35.3%) •기타(2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계부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56.2%) •쓰다가 귀찮아서(18.7%) •가계부를 구하지 못해서 (18.4%)

출처: “중산층 가정서 꼬박꼬박...여성저축생활중앙회 가계부 실태조사”,
 《매일경제》, 1973년 10월 19일자.
 “예산세우기가 어렵다”, 《매일경제》, 1979년 9월 20일자.

1970년대 내지동원을 위한 저축증진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었던 ‘가계부적기 운동’은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인하여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는 물가와 이로 인한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크나큰 저항에 직면하였다. 즉,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데, 가계 예산을 어떻게 세우며, 가계부 결산이 무슨 필요가 있는냐는 것이다. 1973년 제 1차 오일쇼크 직후에 마련된 좌담회에서 한 주부는 물가불안에 대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에서는 앞날이 항상 불안하니까 노후대책도 생각

해야 되고. 물건 값은 끊임없이 오르는 것 같고, 언제 안정된 적이 있었느냐 싶군요. 죽는 날까지 이런 고달픈 현상을 견뎌야 하는 건지. 이전 체념상태예요.⁴⁸⁾

1974년 11월말 현재 도매물가는 37.5%, 서울 소비자 물가는 24.3%가 올라서 한국 가정의 대부분이 물가상승으로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박정희 체제는 오일쇼크에 따른 기업 수익성의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미환율을 20% 인상하는 '12.7 조치'를 시행하였다. '12.7 조치'는 전기요금, 기름 값 등 각종 생필품 가격의 상승을 가져왔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반발과 함께 '가계부 무용론'까지 불러 왔다.

그렇지 않아도 줄라매고 있던 허리띠를 앞으로 어떻게 더 줄라매야 할지 암담하기만 하다. 그렇게도 알뜰하게 적어오던 가계부를 이제는 들여다보기도 싫어졌다. 가계부는 적어도 1개월의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게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 주부들이 수입과 지출 명목을 적어나가는 가정의 경리장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쌀값이 뛰고 기름 값이 오르면 예산이고 뭐고 전부 뒤틀려 버려 가계부의 존재가 치마저 없어져 버렸다. 가계부의 무용론 참으로 주부들에겐 서글프기 만한 현실이다.⁴⁹⁾

결혼생활 3년 이래 항상 '알뜰주부상'을 머리속에 그리며 가계부를 적기 시작했었다는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 49 강영숙 부인(28)은 "작년까지만 해도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한푼 두푼 아껴보려 무던히도 애써왔으나 올 들어서부터는 늘어나는 적자폭에 짜증이 나서 아예 가계부책을 던져버리고 말았다."⁵⁰⁾

금년도 여성저축생활중앙회의 알뜰한 주부상을 받은 유희모 여사(51·서울 동대문구 상봉동 88)는 "아무리 안먹고 안입어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다"면서 살림이 짜증스러워 가계부를 팽개쳤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회사원인 남편과 국민교생 2명 등 4인가족인 이혜숙 부인(37·서울 서대문구 신사동 15)은 "월수입 7만5천원 중 저축으로 2만원을 빼고 나면 사실 쓸 것이 없다"고 말하고 "앞으로 물가가 계속

48) "좌담회 스산한 겨우살이 지혜를 나눈다", 《동아일보》, 1973년 11월 13일자.

49) "주부 걱정만 쌓여 허리띠 어떻게 줄라매야 할지" 《경향신문》, 1974년 12월 11일자.

50) "물가고에 한숨짓는 적자가계". 《동아일보》, 1975년 2월 1일자

오른다면 동물 이상의 생활을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숨짓고 있다”⁵¹⁾

〈주부교실중앙회〉가 전국의 9백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계지출현황비교조사’에서도, “1973년 12월에 비해 1974년 2월의 월수입은 거의 모든 가정에서 500 원에서 10,000 원까지 늘어났으나 주거광열비, 교통통신비, 가사운영비, 교육문화비, 공과비 등 가계부 전체 비목의 어쩔 수 없는 증가현상 때문에 적자를 기록”⁵²⁾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이은 물가인상과 늘어나는 가계적자를 경험한 한국가정의 주부들은 ‘100억 불 수출, 1,000 불 소득’이란 구호로 상징되는 1970년대 경제성장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경제성장?’인지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을 던졌다.

신문이나 라디오에서 듣자면 우리 경제는 해마다 눈부시게 발전한다고 합니다. 국민소득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수출도 이전과 비교 안 되게 늘어났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런 물자의 풍성함이나 소비 수준이 이전과는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도 우리네 살림은 여전히 꾸러나 가기가 힘겨운 것은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행여 쓰임새가 조절될까봐 최근 수년간 소위 가계부란 걸 쓰고 있습니다만 한 달 결산 때마다 느껴지는 공허함이란 적어보지 않은 사람은 짐작하기 힘들 것입니다. 수지의 적자자체도 큰 문제이지만 더욱 한심한 것은 그것이 영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상여금으로 겨우 적자를 때꾸기는 하지만, 집 안에 비상시를 대비한 저축여력을 갖지 못하는 불안은 여간 심각한 게 아니지요. 지난 애깁니다만 작년 한해는 특히 그런 느낌이 더했습니다. 아빠의 봉급은 년 초 3월인가 20% 남짓 올랐었지요. 그러나 우리네 얇은 소견으로도 이 정도의 인상으로는 어렵도 없다는 짐작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전해의 유례없는 물가상승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이 적자로 반전된 뒤였기 때문이죠. 정부통계로도 아마 25%가 넘었다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년 초의 20% 봉급인상만으로는 어렵었지요.⁵³⁾

51) “물가돌풍에 휘말린 서민가계”, 《동아일보》, 1975년 5월 1일자.

52) “한계에 이른 절약생활 주부교실중앙회, 가계지출현황비교조사”, 《동아일보》, 1974년 3월 30일자.

53) “살림살이, 여전히 어려워요. 올해에는 꼭 물가안정을”, 『여원』, 1977년 1월.

물가인상에 따른 가정경제생활의 어려움은 '살림을 못하는 주부는 주부 자격이 없고, 가계적자의 책임은 주부에게 있다'는 1970년대 지배적 주부담론에 대해 의문을 갖게 했다. 작가 박완서는 이러한 1970년대의 지배적 주부담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리하게 반박한다.

중동사태로 물가가 오를 징후가 너무 뚜렷할 즈음에도 정부는 물가안정을 호언장담하고 애꿎은 주부들만 들먹여 불필요한 매점을 삼가라고, 그 구호가 다양하고도 찬란했다. 마치 오만원짜리 월급장이 아내가 비누 몇 장 사 들고 치약 몇 통 사는 것이 물가상승의 가장 큰 근본요인인 듯.

요즈음도 변화가에는 필요 없는 매점행위를 나무라는 구호판을 든 여성단체의 행렬을 심심치 않게 본다. 도대체 무슨 일만 났다하면 구호다. 구호가 모든 것의 해결책인 듯이 책상에 앉아서 그런 안이한 구호를 대량 생산해 내는 분은 어떤 분일까 생각해 본다. 그런 분과 구호에 다함께 혐오감을 느낀다. 만만한건 주부지 물가를 올리고 나서도 주부는 또한 번 들먹여진다.

알뜰 주부가 되란다. 알뜰 가계부의 표본이 공개되기도 한다. 택시 안 타기, 담배를 은하수에서 청자로 하는 십년이 여일한 진부한 구호가 또한 한 번 가장 새로운 아이디어처럼 신문의 가정 난을 장식한다. 도대체 오만원짜리 아내가 절약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고 매점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단 말인가. 근본문제는 그게 아닌 것을. 왜 서로 정직하지 못한 것일까. 불신을 개탄하지만 말고 먼저 정직할 수는 없는 것일까. (중략) 침묵과 내뿜만이 우리의 것임을 우리는 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고만 것은 이 말이 말로서가 아니고 이 어려운 시기를 사는 서민의 정직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이견 말이 아니라 믿음이다.⁵⁴⁾

그리고 1979년 7월 제 2차 오일쇼크로 인한 '유가 60% 인상, 전기료 35% 인상' 소식은 적자 가계에서도 힘겹게 가정경제를 지탱하던 한국 가정의 주부들에게는 충격과 분노 그 자체였다.

김애자: 발표를 듣던 날 막막하고 억울하던 심정으로 누군가의 먹살이

54) 박완서, "허황된 구호보다 책임행정을" 《동아일보》, 1974년 2월 4일자.

라도 잡아 흔들고 싶었습니다. 자가용타고 편하게 사시는 분들도 우리처럼 버스타고 시장에 좀 가보라고 말입니다. 나는 결혼 후 20년 동안 한 해도 쉬지 않고 가게부를 써왔습니다. 요즘은 종이로 봉투들을 만들어 놓고 월초에 아예 월급을 항목별로 나눠놓습니다. 어느 한 항목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다른 일 할 돈을 써버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래도 한 달 한 달이 빠듯하던 살림인데 이번에 또 이렇게 엄청나게 물가가 오르다니.

박혜경: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국가의 앞날을 위해 저축을 하겠다고 저축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축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적 환경이 먼저 되어야지요. 최근 소비절약이란 말이 부쩍 많이 쓰이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과는 여전히 무관합니다. 수천만 원짜리 보석이 상점에 나오기가 무섭게 팔린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네 서민은 그럴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유례없는 허영심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뿌리를 박은 걸까요. 우리 국민은 항상 불안해하며 살아왔습니다.

임선희: 지금까지 항상 말은 그렇게 해왔죠.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절약은 결국 더 이상 절약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만 강요되어 왔습니다.

박혜경: 이번 유가인상으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이 영세민과 정액봉급자들입니다. 정부에서 이들을 위한 보완책을 계속 마련하고 있는데 수차나 명목뿐이 아닌 그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보장이 돼야합니다. 또 요즘 긴축이 계속되니까 기업들이 감원을 하겠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틀려먹은 생각입니다. 특히 지난 호경기동안 수많은 근로자들의 희생으로 기업을 키우고 발전한 대기업의 경영자들이 지금 옛날만큼의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그들을 감원 한다는 건 배은망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서민이 교통비를 줄이고 담배를 끊어 절약한다면 기업은 전에 번 돈을 풀어서라도 근로자들과 고락을 같이 해야 합니다.⁵⁵⁾

박정희 체제 말기에 들어와서 주부들은 1970년대 동안 강조해 왔던 ‘가계부적기’와 ‘소비절약’을 통한 저축이 “더 이상 절약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만 강요된 저축”이었음을 인식한다. 1970년대의 경제성장이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이룬 것이지만, 성장의 과실은 온전히 재벌을 비롯한 사회 상류층이 독식했음을 자각한다. 1970

55) “인상 폭보다 불안의 폭이 더 큼니다 첫 날의 분노 이제는 허탈로 바뀌고… 유가소크… 주부의 놀람과 각오와 바람 좌담”, 《동아일보》, 1979년 7월 13일자.

년대 '가계부적기 운동'이 박정희 체제 말기에 들어와 한국가정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이유는 이러한 1970년대 경제개발의 성과는 지배 계급이 전유하고 대다수 한국 가정에는 '절약과 내핍'을 통한 희생만을 강조한 '가계부적기 운동'의 내재적 한계 때문이다.

VII. 맺는 말

1970년대 박정희 체제에 대한 평가는 '경제는 잘했는데 독재가 문제'라는 식의 평가가 대체적이다. 그러나 1970년대 경제성장이 당시 한국가정의 경제생활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1970년대 '가계부적기 운동'이 나타난 배경, 성격 그리고 진행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박정희 체제가 한국가정의 일상적 경제생활을 왜 그리고 어떻게 통제했는지를 분석하고, '가계부적기 운동'으로 표현된 박정희 체제의 물질적, 이데올로기적 통제가 당시 한국가정에서 어떻게 수용·반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1970년대 '가계부적기 운동'의 경제적 배경은 1970년대 초에 있는 한국자본주의의 축적위기였다, 박정희 체제는 한국자본의 축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내에서의 자본조달이 필요했고, '가계부 적기 운동'은 내자조달을 위한 '저축증진운동'과 함께 진행되었다. 박정희 체제는 소비절약과 내핍을 통한 가계저축의 증진을 강조하였고, 가계부는 가계저축을 늘리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의 하나로 강조되었다. 1970년대 '가계부적기 운동'의 담론은 저축을 소득의 문제가 아닌 소비의 문제로 치환했으며, 저축의 책임이 소득을 벌여오는 남성가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림을 맡은 여성주부에게 있는 것으로 책임의 소재를 전환시켰다. 즉, 저축하지 못하는 이유는 살림을 맡은 주부의 무절제한 소비 때문이며, 무절제한 소비를 통제하기 위해서 가계부를 적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가계부적기 운동'에 내재한 주부담론이었다. <여성저축추진생활중앙회>와 같은 관변 민간단체가 가계부 무료 배부, '소득별 가계지출모형' 개발을 통한 가이드라인 제시, '알뜰한 주부상' 선정 등을 통하여 '가계부적기 운동'을 주도하였다. '가계부적기 운동'은 초기에는 가계저축률의 증가와 같은 '성과'를 올렸으나, 1970년대에 있는 두 차례의 오일쇼크와 급격한 물가인상은 한국가정의 경제생활에 위기를 가져왔으며, 가계저축률의 하락과 함께 '가계부 무용론'까지 등장하였다. 1970년대 한국가정의 대다수는 물가인상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가계적자에 시달려야 했으며, 적자가계에서 가계부를 적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가정이

늘어났으며, ‘가계부적기 운동’에 대한 반발이 증가하였다.

1970년대 한국가정의 경제생활 영역은 권력체제의 유지·강화 전략이 관철되던 공간이었다. 이 연구의 공헌은 1970년대 ‘가계부적기 운동’의 배경과 한국가정에 수용 및 반발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 운동이 소비절약과 저축을 위하여 한국가정에서 자발적으로 채택된 운동이 아니라 1970년대 한국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박정희 체제의 유지·강화 전략에서 추진되었으며, 관변단체와 관변지식인들을 동원하여 1970년대 오일쇼크에 따른 가정경제의 위기를 국가의 책임이 아닌 주부의 책임으로 내면화하는 운동이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이다. 이 연구의 한계는 1970년대 가정주부와 관련한 여성담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작동되었는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으며, 1970년대 한국가정의 경제생활이 어떻게 유지·변화 되었는지를 계층별로, 지출항목별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들은 다음 연구의 과제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고원 (2008). 새마을 운동의 농민동원과 '국민만들기'. 국가와 일상 박정희 시대 : 한올아카데미.
- 공제욱 (2008). '혼분식 장려운동'과 식생활의 변화. 국가와 일상 박정희 시대 : 한올아카데미.
- 김명숙 (2008). 국가동원과 '가족계획'. 국가와 일상 박정희 시대 : 한올아카데미.
- 김수행 · 박승호 (2007). 박정희 체제의 성립과 전개 및 몰락.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태균 (2013). 8·3 조치와 산업합리화 정책 : 유신체제의 경제적 토대 구축과정. 역사와 현실, 88, 101-144.
- 박승 (2010).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 한국일보출판국.
- 박정자. 1974년 가계부.
- 이승훈 (2008). 강제된 주거공간과 농민의 일상. 국가와 일상 박정희 시대 : 한올아카데미.
- 전순옥 (2004). 끝나지 않은 시대의 노래 : 한겨레신문사.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 한형성 (2015). 1920~30년대 가정회계와 가계부 담론. 경영사학 30(3), 85-113.

‘Home Accounting Movement’ in Park Chung Hee Regime in the 1970s*

Hyung-Sung Han**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economic growth of the Park Chung Hee regime in the 1970s affected the economic life of Korean families through the ‘home accounting movement’. In the 1970s, the ‘home accounting movement’ was carried out in conjunction with the ‘household saving promotion movement’ to provide domestic capital. ‘Home accounting movement’ led by an organization like the ‘women's saving promotion association’, emphasized savings through household bookkeeping. Although the ‘home accounting movement’ was successful in the early stages, it faced a backlash from the Korean family because of the price increase and the burden of living costs.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nature, and process of the ‘home accounting movement’ and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home accounting movement’ on the economic life of Korean families in the 1970s.

〈Key Words〉 home accounting, Park Chung Hee regime, 1970s, household saving, Korean family, housewife discours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과제번호)(NRF-2016S1A5A8018599)

** Assistant Professor, Da Vinci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